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단 반세기 만에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리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화해·협력의 흐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튼튼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천년 첫해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등을 통해 남북 평화공존을 구축하고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1. 평화와 화해·협력의 기반 조성 / 5
 2. 남북경협 활성화 / 11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 19
 4.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 23
 5.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 29
 6.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 33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39
 8. 경수로사업 추진 / 45
 9. 남북대화 재개 노력 / 51
10.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 / 55
11. 대북정책 향후 추진방향 / 61

1. 평화와 화해 · 협력의 기반 조성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①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협력을 적극 도모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는 정책」이며,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고, 나아가 남북간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는 정책」이다.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외자유치 등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남북간에 화해·협력의 흐름이 정착되고 있는 바, 통일농구대회, 통일음악회 등 여러분야에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17만명을 넘는 등 인적왕래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남북교역도 1999년에는 사상최대치인 3억3천만불을 기록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남북간의 현저한 국력격차,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등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교전에서의 단호한 대처와 같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월 3일 새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 종식,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은 탈냉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폐쇄와 통제 속에 안주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같은 대결정책을 통해 체제보장을 추구하여 한반도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결정책은 한반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대결과 협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미·일을 포함한 한반도문제 당사자들이 안보문제와 함께 정치·외교·경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한다.

또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장기적인 과정인 만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면담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기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포괄적 접근」을 추진한 결과 1999년 9월 미·북 베를린 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공식 선언하였다.

일본도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일본과의 공조, 중국·러시아의 협조하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경협 지원체제 구축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간다는 일관된 정책기조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 ●

접촉·방북

-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교역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178개로 축소
-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 폐지
- 경협용 물자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협력사업

-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투자제한업종의 명시(Negative List)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

또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분야가 다양화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주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수로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에 사용되어 왔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1999년 10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 고시)을 제정, 기금에서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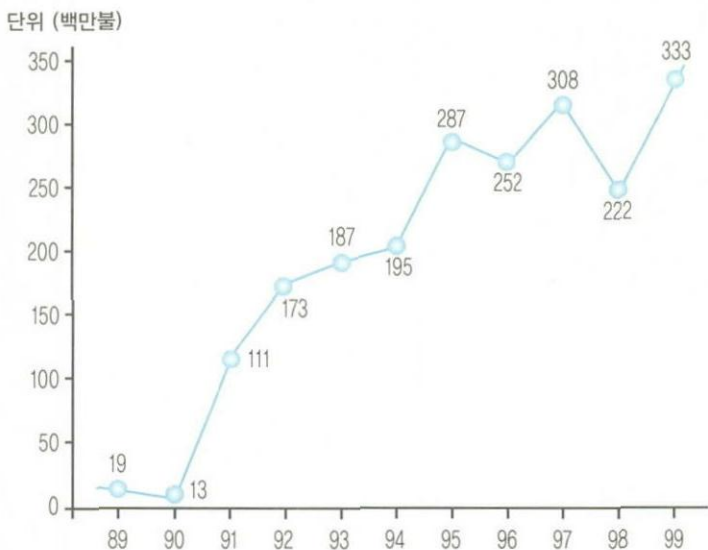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는 한편,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후원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역규모 증대

1989년 1천9백만불 규모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1991년 1억불, 1995년 2억불, 1997년에 3억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1998년 일시적으로 2억불대로 떨어졌으나, 1999년에는 약 3억3천만불(위탁가공 교역 1억불)로 남북교역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교역액 추이 ●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 물자와 경수로사업 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교역수지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반입이 반출보다 많은 교역적자 상태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반입 여력의 약화로 반입이 감소되었던 1998년과 비거래성 반출이 많이 이루어진 1999년에는 반출이 반입보다 많은 흑자를 기록하였다.

● 남북교역 현황 ●

(단위:천불)

연도	명목 교역액	비거래성 교역액							실질 교역액	교역수지	
		반출						반입		명목수지	실질수지
		경수로	대북지원	중유	금강산	협력사업	소계				
'97	308,339	17,842	8,389	29,019			55,250		253,089	△77,799	△130,261
'98	221,943	3,954	15,628	19,819	37,551	1,197	78,149	105	143,689	37,415	△40,629
'99	333,437	14,434	43,426	39,512	40,696	6,332	144,279	122	189,036	90,228	△53,929

※ '99년 말 현재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던 '97년보다 8.1% 증가한 상태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교역업체수의 경우 1989년 30개에서 1999년 581개로 증가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에는 2천만 불 수준을, 1996년부터는 7천만불 수준을 넘어섰으며, 1999년에는 1998년도 대비 40.3% 증가한 9,962만불을 기록하였다.

● 위탁가공 교역액 추이 ●

(단위:천불)

	'92	'93	'94	'95	'96	'97	'98	'99	계
금액	839	7,008	25,663	45,892	74,402	79,069	70,988	99,620	403,481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교역업체수는 1992년 최초 4개에서 1999년에는 130개로 증가하였으며, 품목도 섬유·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TV, 자동차배선, 컴퓨터 모니터 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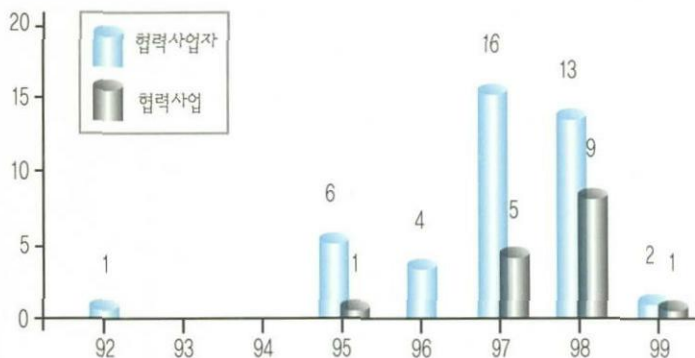
경제협력사업의 증가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2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회사에 대한 최초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38건이다.

협력사업 승인은 1995년 「대우」에 대한 최초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17건이다.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추이 ●

단위 (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많은 분야에서 경협이 추진중이며, 2000년 1월 말까지 승인된 협력사업 총 17건 중 10건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대우」의 남포합영공장이 1996년 8월부터 가동중이며, 「태창」의 금강산생물개발 합영사업과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도 올해 초에는 생산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현대」의 서해안공단사업은 북한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성사 시 남북경협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삼성」의 전자제품 임가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수리 공장건설 등 대규모 경협이 진행중이다.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사업,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남북한 공동브랜드 담배생산사업 등 기타 분야의 협력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추진 경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 1998년 6월 22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신변안전보장문제', '통신보장문제', '입북료문제' 등에 합의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7일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으며 2개월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가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하였다.

추진 현황

관광이 개시된 이후 2000년 1월 말까지 171,558명(외국인 76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9년 6월 우리 관광객의 억류사건으로 한때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정부는 관광객 억류조치가 남북간의 합의사항 위반임을 북측에 강력

히 항의하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가운데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안전보장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재확인한 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방북자의 신변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9월 정부내 협의기구인 「북한방문자 신변안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광도중 관광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점차 관광코스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관광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온천장이 개장되었고, 장전항 부두공사가 완료되어 부두~출입국관리소간 도로만 개통되면 부속선의 이용없이 관광객 이동이 가능해져 보다 편안한 관광이 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관광기반시설 개발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종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한간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에게 남북경협이 유용성을 인식시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실상을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통일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남북한간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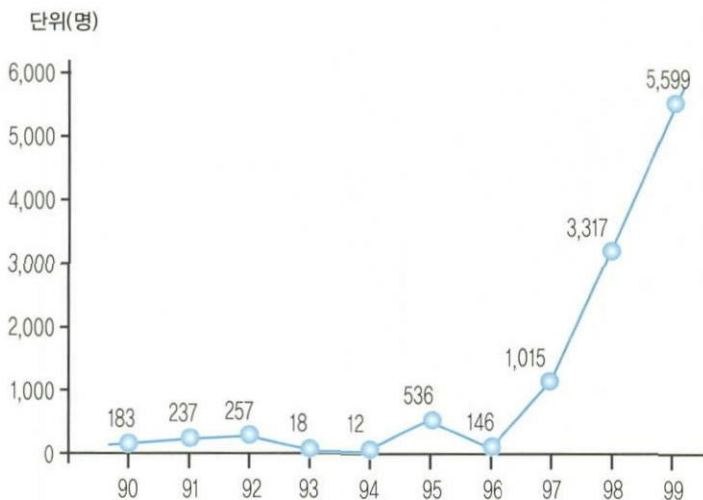


인적왕래의 급증

방북이 허용된 1989년 이후 1999년 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방북인원은 누계 1만명을 넘어섰다.

방북인원은 1998년 이후 급증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1월 말까지 9,272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989년 이래 9년 동안 이루어진 전체 방북인원의 3.8배를 넘는 수치로 금강산 관광사업, 경제협력, 대북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방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방북인원 추이 ●



분야별로는 교류협력 초기단계인 1990년과 1991년에는 체육과 예술분야에서 시작하여, 1992년부터 경제분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수로지원 사업분야와 대북지원분야 방북이 199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관련 실무인원의 방북이 대폭 증가하였다.

● 주요 분야별 방북 추이 ●

(단위:명)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계
전 체	183	237	257	18	12	536	146	1,015	3,317	5,599	11,320
경 제	-	1	28	-	12	109	80	127	231	245	833
체육예술	93	103	-	6	-	-	-	-	87	269	558
경수로	-	-	-	-	-	22	58	711	756	911	2,458
대북지원	-	4	-	-	-	399	-	151	129	364	1,047
관광지원	-	-	-	-	-	-	-	-	1,962	3,744	5,706
기 타	90	129	229	12	-	9	8	26	152	66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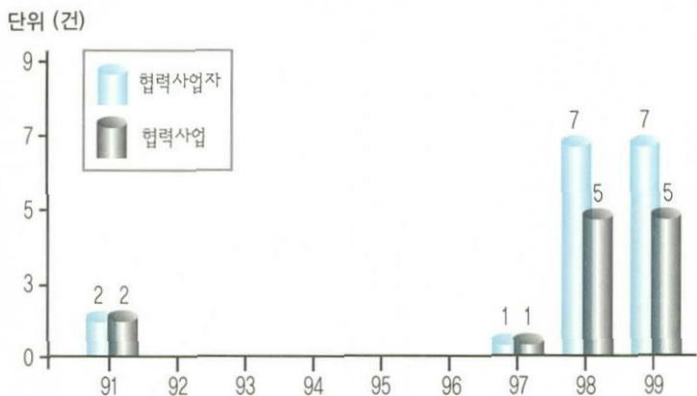
※ 「관광지원」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협의·추진을 위해 방북한 인원(관광객 제외)

사회문화교류 다양화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자 승인은 1991년 대한탁구협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국제대회 참가사업에 대한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총 17건이다.

협력사업은 1991년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승인 이래 2000년 1월 말까지 13건이 승인되었다.

●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추이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술·체육분야 남북한 왕래행사가 성사되어 제3국 행사 위주로 개최되어 오던 기존 사회문화교류 추세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공연분야에서는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과 「윤이상 통일음악회」가 성사되었으며, 1999년에도 여러 단체에 의해 합동음악공연이 추진되었다.

체육분야에서도 1999년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제1차 「통일농구경기」가 성사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였다.

5.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정부는 이산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4월과 1999년 6~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측의 회피적 자세로 성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정례화를 추진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당국간 해결노력과 병행,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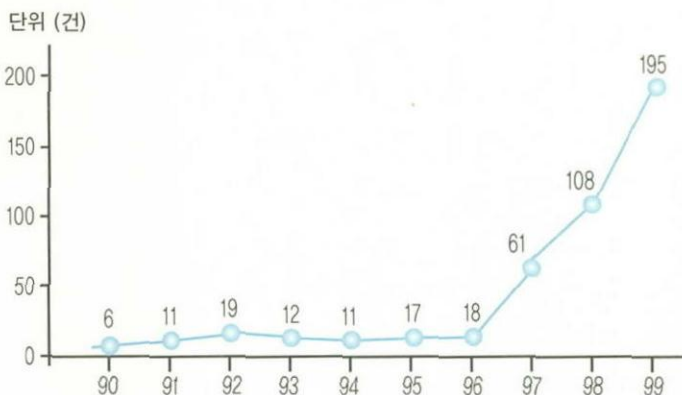
그 일환으로 1998년부터 이산가족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사확인의 경우는 40만원, 상봉의 경우는 8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되, 국군포로가족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

구분	'98년		'99년		계	
	건수	액수(만원)	건수	액수(만원)	건수	액수(만원)
생사확인	41	1,720	89	4,030	130	5,750
상봉	55	5,024	142	12,240	197	17,264
계	96	6,744	231	16,270	327	23,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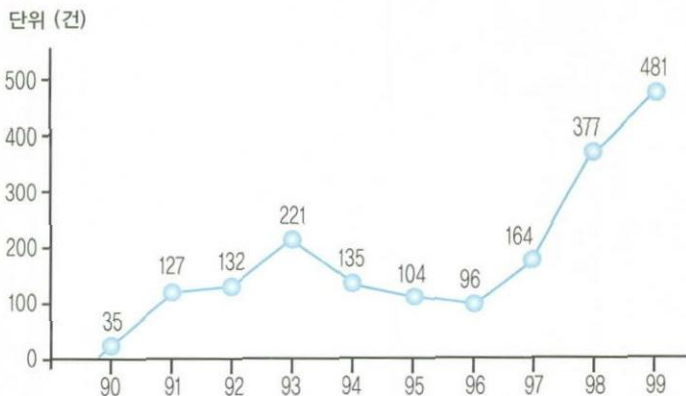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1월 말까지 생사확인 852건 및 상봉 305건이 성사되어, 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3.7배, 8.4배로 증가(10년간 실적의 45%, 65%)하였다.

●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추이 ●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한 방북은 1998년 최초 성사된 이후 2000년 1월 말까지 6건이 성사되었다.

●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이 ●



이산가족교류 행정서비스 개선

이산가족교류에 따르는 제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998년 9월부터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였고, 신청서류를 기존 7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본격화에 대비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고, 1999년 6월부터 인터넷(reunion.unikorea.go.kr)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2000년 1월 말까지 접속건수는 9,900여회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108건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접수하여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하였다.

6.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대북지원의 방향

정부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하되, 인도적 지원은 조건이나 상황에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에 역점을 두는 대북지원 추진기조를 확립하였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인도적 취지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적극 활성화하였다.

1999년 2월 10일 「민간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를 발표하여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를 허용하여 대북지원 관련 남북주민간 접촉을 확대하고 민간 단체의 불편도 해소하였다.

1999년 10월 27일에는 민간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우리 상표가 붙은 비료를 직접지원, 쌀 증산에 기여하게 되었음은 물론 우리의 지원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분배과정 확인을 위한 방문을 통해 분배투명성을 개선하였다.

북한의 1999년 쌀생산은 시비(施肥) 확대로 1998년 대비 15% 증가되었는데, 북한의 1999년 비료도입량 총27만톤 중 남한 지원분은 16.1만톤(민간지원 포함)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방식이 더 효과가 크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북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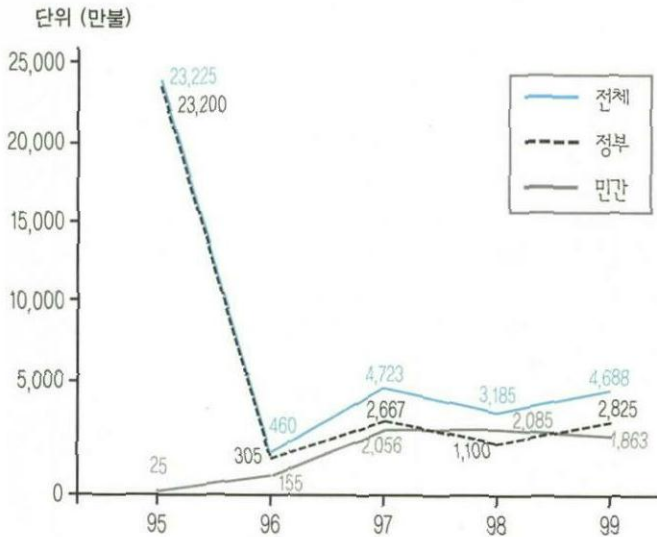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1월 말까지 7,965만불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을 지원하였다. 연평균 지원규모는 과거에 비해 39% 수준이며, 특히 민간지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복지원 규모 ●

(단위:만불)

구분	정부차원	민간차원	전체규모
'95.6-'98.2	26,172	2,236	28,408
'98.3-2000.1	3,925	4,040	7,965
계	30,097	6,276	36,373

● 대복지원 추이 ●



식량·생필품 등 일회성 지원보다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비료·농자재·종자 등 농업개발지원과 인도적으로 시급한 의약품 등 보건의료 지원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 대북지원 규모 및 구성비 ●

(단위:만불)

구 분	일반구호	농업개발	보건의료	전체규모
'95.6-'98.2	28,009 (98.7%)	210 (0.7%)	189 (0.6%)	28,408 (100%)
'98.3-2000.1	3,535 (44.4%)	4,197 (52.7%)	233 (2.9%)	7,965 (100%)
계	31,544 (86.7%)	4,407 (12.2%)	422 (1.1%)	36,373 (100%)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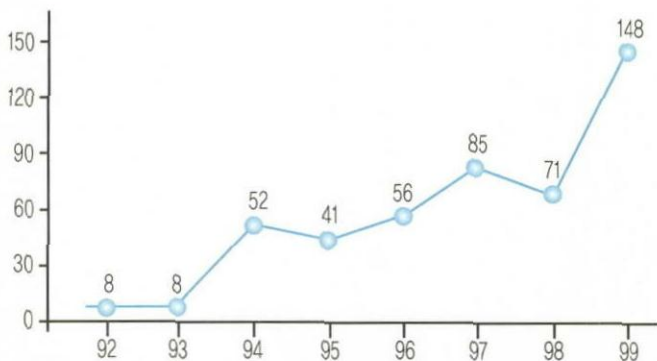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입국자는 199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에는 148명을 기록하였다. 2000년 1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1,105명이며, 현재 889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추이 ●

단위 (명)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양상을 보면 신분이 외교관, 노동자, 별목공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가족동반 입국의 증가로 인해 여성·노소연령층이 많이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증가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과거의 단순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통일 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본인식을 전환하였다.

정부는 원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지방·민간 차원의 종합적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1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지방차원에서는 1998년 8월 각 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제」 시행으로 거주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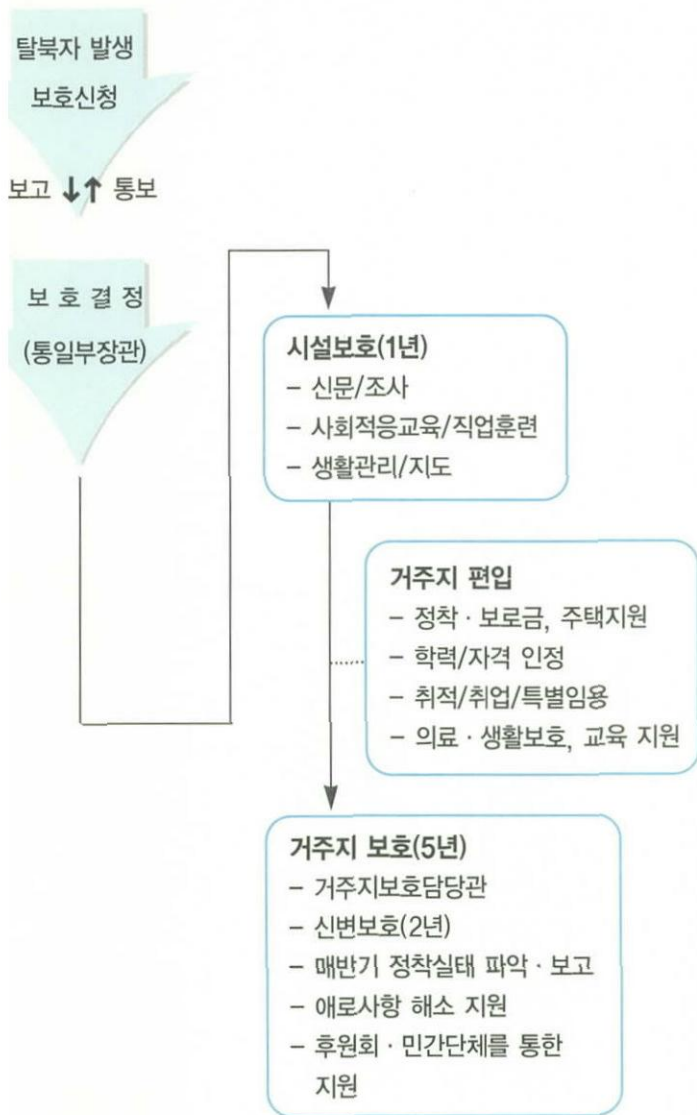
특히 1999년 7월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의 실시를 통한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인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1998년 12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시행령」의 개정·시행을 통해 초기 정착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999년 말에는 취업보호제 등을 주내용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하였다.

2000년에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시행을 통해 취업보호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정착의 핵심적 관건인 취업강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다양한 종교·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민간단체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편입 이후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1999년 5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종합생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각종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



8. 경수로사업 추진



사업 개요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100만KW급 2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경수로사업은 우리 나라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KEDO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국내 협력업체가 설계, 제작, 시공 및 사업관리 등 사업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남북간의 다양한 접촉과 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분야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터 민족공동발전은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사 추진 현황

부지준비공사

1997년 8월부터 부지준비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1월 말 현재 전체 부지정지물량의 57%를 완료하였다. 부지정지 이외에 도로·통신 등 공사기반시설과 숙소, 운동시설, 여가 시설 등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마련하였다.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대비하여 도로 확충, 공업 용수관 매설, 근로자 숙소·후생관 건설 등 인프라 구축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0년 1월 말 현재 우리측 근로자 270여명, 북측 근로자 200여명 등 총 470여명이 공동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주계약 체결 및 본공사 착공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Turn Key Contract)이 체결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주계약 체결은 경수로사업이 구체화·실천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주계약이 발효되어 본공사가 개시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 오던 부지정지공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취수방파제·물양장 등을 건설하는 본격적인 공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998년 11월 9일 KEDO 집행이사국은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예상사업비를 46억불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맞게 실제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재원분담결의」의 후속조치로서 1999년 7월 2일 우리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1999년 8월 19일 발효시켰다.

1999년 12월 15일에는 「차관공여협정」의 이행을 위한 KEDO-한국수출입은행간의 용자계약을 체결하여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두 마련하였다.

경수로사업비는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 완공 후 3년 거치 17년 동안 상환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사업비는 한국전력 및 국내 협력 업체를 통해 근로자 인건비와 설계비 및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국내 고용창출과 내수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남북대화 재개 노력



전반적 상황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취임사,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측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직까지 북한측의 당국간 대화 회피로 인하여 본격적인 남북대화 국면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는 회담에 연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형식과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에게 항상 대화의 문을 개방해 놓고 있으며,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나오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회담추진

남북당국대표회담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비료문제를 포함한 상호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대표회담이 1998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와 함께 특사교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북측이 선(先) 비료지원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1999년 6월 3일 남북당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비공개 접촉을 통해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 및 비료 20만톤 지원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이 베이징에서 2회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당면문제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고위급회담으로의 발전문제 등을 제기하는 한편, 남북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긴급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측이 서해사건, 황장엽 인터뷰 문제 등 회담외적 문제를 내세워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회피함으로써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대북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대북구호물자 전달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적십자 대표접촉이 1998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어 제3차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4자회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2월에서 1999년 8월 사이에 4자회담 본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5회 개최되었으며, 남·북한, 미국, 중국은 2개 분과위(평화체제, 긴장완화)의 가동에 합의함으로써 실질문제 토의단계에 진입하였다.

우리측은 실효성있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이 주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0.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



국민과의 대화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책설명회, 강연회, 해설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통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한 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UniKorea」(www.unikorea.go.kr)를 통해 통일·대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현안자료 등을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PC통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신세대에게 정부의 대북정책과 추진성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1998년 7월 월간 영문 뉴스레터인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창간하고 KBS 국제방송과 해외 동포언론의 「통일칼럼」 지원, 동포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550만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제고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여론수렴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24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컸으나 남북관계 현실에서 최선의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65%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계 원로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북한정보·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회담·교육홍보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활성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체계화·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19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통일교육 진흥노력과 민간 통일교육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일교육 실시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1세기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자료 개방 추진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 폭을 넓히고 통일대비 북한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 및 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자료센터」에서는 통일·북한자료를 열람·대출해 줄 뿐만 아니라 북한영화 상영과 북한실상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0월 22일에는 '북한바로알기'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TV 위성방송의 시청을 허용하였다.

이 조치로 방송사 등 언론사는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11. 대북정책 향후 추진방향



기본 방향

정부는 2000년 1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2000년 대북정책 추진의 3대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추진 계획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경제공동체」는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역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진행될 경제교류협력도 모두 묶어서 지칭하는 기능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경제교류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을 통해 남북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추진방안 등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간에 「남북경제공동체 협의 준비위원회」를 2000년 1월 17일 발족시켰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경수로 본공사,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서해안 공단조성, 평화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등의 경협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남북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확대, 투자보장협정 등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원공동개발 및 남북교통망 연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실리추구적인 차원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나갈 것이다.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주력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한 본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단체를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이산가족 1세대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빨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여 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미·일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따라 남북관계 진전도 병행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제고할 것이다.

남북교류의 다변화 추진

정부는 민간교류가 체육, 문화, 예술, 학문, 종교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유지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미·일과의 관계 개선 및 국제기구 가입 등을 지원할 것이다.

